

## ▶ 매일 INDEX



7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답  
의산시 명예도로 '하림로' 명명식

2020년 6월 8일 월요일(음 4월 17일) 제2551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 에너지11, 익산에 1000억원 대규모 투자

이차전지 제조공장 신설

전북도 · 익산시 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와 익산시는 5일 도청에서 (주)에너지11과 나트륨 이차전지 및 이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에너지11은 익산합열농공단지 24만7,563㎡(7만5,000평) 부지에 약 1,000억원을 투자, 이차전지 및 이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제조공장을 구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익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 성장 2030년에는 약 1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지금으로부터 30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17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원자재 매장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 흐름이 매우 불안정하며 폭발이나 화재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익산시-(주)에너지11 투자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 허탁 인터파크 비즈마켓 대표, 김용탁 (주)익산LED 협동회단지개발 대표, 정현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투자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11은 기존의 리튬이차전지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나트륨 이차전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마치고 현재 성능 검증 중이다.

나트륨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차전지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과 2배나 좋은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함께 폭발이나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11은 양산 초기에는 가정용 3㎾ 및 1㎿급 모델의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주축으로 국내 시장에서 상용 시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기술향상을 통해 전기카트용, 전기자전거용, 소형 전기차용, 노선버스용 나트륨 이차전지를 개발, 출시 예정이다.

(주)에너지11의 신규투자로 전라북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의 물품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도 투자를 결정한 (주)에너지11의 헌영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에너지11이 국내 최

초로 나트륨 이차전지 상용화에 성공하여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기원한다"고 덧담을 건넨데 이어 "전북도와 익산시도 협약을 체결한 (주)에너지11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교장공모제 12곳 추진

초빙 · 내부형 11, 개방형 1교

전북교육청, 12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2일까지 교장공모제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방형 8개교, 내부형 3개교, 개방형 1개교로 총 12개교다.

초방형은 △군산내홍초 △군산월명초 △용신초 △수곡초 △이평초 △덕과초 △주생초 △군산자연초 등에서 운영한다. 내부형은 △대리초 △남원초 △임피중에서 운영되며, 특히 남원초와 임피중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여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산고등학교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한다.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등 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 가능하다. 공모 교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춰 해당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접수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경우 오는 15~18일 재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6월 25~30일까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7월 2~7일까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8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용 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4년 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타당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으로, 2007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에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은성 기자

**시민에 건강한 먹거리 · 농민에 안정적인 소득을**

## '전주푸드플랜' 탄력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15일부터 본격 시행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인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에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의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과 국가먹거리 전략 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인정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는 세부조례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p